"내년 상반기 완료" VS "지방 선거후"

〈한나라당〉 〈민주당〉

李대통령 '개헌' 언급에 정치권 격론 예고

친박계 '속도 조절론'… 선진당도 '부정적'

정치권 내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헌법연구자문위가 지난달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개헌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연합뉴스, 일본 교도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제한적 개헌' 검토 필요성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16일엔 제1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수원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빠른 시간 안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어떤 안이 있는지 내놓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적인 공감대는 미흡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지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헌의 시기와 폭 등을 놓고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단 이날 '내년 상반기까지의 개헌 완료'를 목표로 개헌 논의에의 본격 착수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개헌 여론몰이에 나섰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당내 한 의원모임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정치의 중심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가현안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제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의총 논의를 거쳐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이며,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문제를 다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개헌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 대통령 주도의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국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등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반론의 요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지금 대통령의 말만 있고 한나라당의 개헌안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욕심만 있지 실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기 의중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8·15 경축사에서는 개헌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고, 조금 있으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선진당도 전날 "이 대통령이 개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제한적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소폭으로 하려면 차라리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것이 낫다"며 "개헌을 하려면 광폭으로 해야 한다"며 '제한적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16일 일본의 제93대 하토야마 유키오〈왼쪽에서 세번째〉 총리가 취임한 후 총리 관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행정 개혁" 日 하토야마 총리 취임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16일 오후 총리에 취임, 일본 정치사의 새 장을 열었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특별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중의원 480명중 327표를 얻어 제 93대 일본 총리에 선출됐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참의원 총회에 참석해 "오늘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정치와 행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스타트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부터 우리는 미지의 세계와 조우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행동해 달라"며 의원들에게 새출발의 결의와 자각을 촉구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후 내각 인사를 공식 발표한뒤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권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과 함께 국정을 챙긴뒤 오는 24일부터 각각 뉴욕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쌀값 10% 하락 때 전남농가 피해액 5천300억"

민주당 김영록 의원

쌀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올 전남지역 쌀 생산 농가의 피해액이 최소 5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국회 농식품위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사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올 수확기 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7.9% 하락한 14만9천원~15만3천원/80㎏이었다. 이 경우 쌀 농가의 순수익이 22% 떨어진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80㎏ 한 가마 쌀값은 14만7천980원으로 지난해 쌀 수확기 때 가격보다 8.9%(1만4천436원)나 떨어졌다. 쌀 수확기가 오기도 전에 예상치보다 더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쌀 가격 하락 현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농협의 10톤 재고쌀 수매 및 시장 격리에도 불구,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쌀 수확기가 되면 쌀값이 더욱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측은 지난해 수확기보다 쌀값이 10% 떨어지면 순수익은 30% 하락,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전남 쌀 농가의 올 피해액이 5천3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5천억원 피해 예산액은 쌀값이 10%만 하락할 때 나온 추정치로 현재 추세로라면 그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쌀 가격 하락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재고미 처리·대북 쌀 지원 등 쌀값 안정 대책을"

한나라 박재순 최고위원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16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시급한 재고 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생산 쌀의 재고미 69만t 처리에 대해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13일 대통령 주재 현장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근본적인 쌀소비 촉진을 위해 '쌀 가공식품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지만 아직은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난 10일 일부 야당의원이 발의한 '대북 쌀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달 시작된 정부의 재고 쌀 10만t 매입에 대해 생산농민들은 시기가 늦었고 농협의 역경매 방식의 공개경쟁입찰로는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회·중앙부처 돌며 내년 예산 확보 총력

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가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 지사는 16일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면담한 뒤 오후엔 제284회 정기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방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2010년 국고지원과 F1지원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날 윤증현 장관에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포함돼 있는 압해~암태간 새천년 대교 건설사업비 300억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비 1천700억 원 등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관련 여수~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사업비 600억 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천500억원 등을 요구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호남권 4대축 중심 에너지·부품소재산업 육성

정부 '5+2 광역권' 개발에 5년간 126조 투입

오는 2013년까지 전국을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수도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 및제주권의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모두 126조4천억원(국비 71조, 지방비, 24조, 민자 30조)이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광역권별 시·도들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작성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은 새만금과 전주, 광주, 목포, 광양만권을 각각 연결하는 4대 축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산업이 육성되고 새만금 개발과 호남고속철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 집중해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된다.

기존 대덕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IT)과 생명기술(BT) 산업의 핵심거점을 만들고 과학기반형 광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동남권은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등 기간산업과 물류 중심지로 육성된다. 부산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물류·국제비즈니스축을 형성하고, 울산을 거점으로 자동차^조선축을 만든다.

대경권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생태환경축을 만들고, 낙동강 중심의 문화경제축을 형성해 문화^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미와 대구, 포항을 연계한 지식기반축과 울산 포항을 잇는 해양연계축 등 T자 축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축을 형성한다.

수도권은 산업육성보다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해 국제 업무거점축으로 키우고, 인천부터 서해안까지는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 산업 및 물류거점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tuim@

국고 보조 지방사업 200개→24개 통폐합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의 세부 항목이 현행 200여 개에서 24개로 단순화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할 경우 전액 국고를 지원하고, 접경·도서지역 등 이른바 특수상황지역은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을 심의, 확정했다. /연합뉴스